

더 좁아진 교원 임용문...더 속터진 예비 교원들

내년 광주 초등학교사 단 6명 선발, 9년제 98% 급감...전남도 67% 줄어 광주교대생 중도탈락율 4년새 4배↑...중등교사도 광주 60·전남 20%↓ 임용준비생들 “해도 너무한다” 반발...전교조 정원 감축 저지 천막농성

학령인구 감소 흐름 속에 정부가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어 광주·전남 곳곳에서 한숨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생은 그대로인데 반해 임용문은 바늘구멍 보다 좁아지고 있어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과 일선 교사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광주 초등학교 교사는 6명을 선발한다. 지난 2014년 300명을 뽑던 것에 비하면 9년 새 98% 급감한 것이다.

전남 초등학교사 선발인원은 2015학년도 495명에서 2023학년도 163명으로 67%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 정원 2차 가배정 인원을 통보했다. 내년도 광

주 초·중등 교원 정원의 감소폭은 전년보다 최대 3배 감소했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도도 2023학년도 초등교원 정원은 50명, 중등교원 정원은 279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세운 교사 정원 감축의 핵심 명분은 학생 수 감소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교원의 정원 자체를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초·중등 교원 선발인원이 다시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선생님의 꿈을 안고 교대와 사범대를 선택한 학생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이 교원 감축 정책만 내놓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용 합격의 문이 좁아지면서 교육대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

시자료에 따르면 매년 300명 졸업하는 광주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은 2017년 0.5%에서 2021년 2.3%로 4배 급증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험 지원 경향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연고지 위주로 지역을 결정해 임용시험에 지원했다면, 최근에는 연고가 없더라도 경쟁률이 낮거나 선발 인원이 많은 곳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대에 재학중인 김준형(24)씨는 “전국적으로 교원 선발인원이 줄다 보니, 연고가 아닌 지역이라도 일단 합격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합격한 뒤, 원하는 지역으로 오기 위해 임용 재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학생까지 생기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광주교대생은 “좁아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 회계사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무작정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당장 전교조 전남지부는 2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저지를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지난 70년간 전국 교원 정원이 감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5년동안 교원이 감축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떠나 전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간제교사 채용’ 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 채용으로 줄어드는 교원정원의 90%까지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하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는 “기간제교사 채용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정원을 결정하면,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는 적은 전남은 교사 수가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모두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꺼지지않는 쓰레기 야적장 불 고흥서 사흘째 진화작업

고흥의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나 사흘째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고흥소방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적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중 비닐과 폐어구 등 불에 잘 붙는 생활쓰레기에 계속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틀째인 27일 큰불은 잡혔지만 남아있는 불씨를 잡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일일이 쓰레기를 뒤집어 가며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화재가 난 쓰레기 야적장에는 폐기물 3000t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는 유독가스 등이 발생해 접근이 쉽지 않고 야적장 인근에 소화전이 없어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계자는 “28일 오전 9시 기준 화재 진화율은 60%로 진화작업은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5·18부상자회 “행불자 전수조사 나서야”

행불 비인정자 추가 접수 시작

오월단체가 최근 5·18 당시 행방불명자 열경선씨의 암매장 사실이 밝혀진 데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28일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에서 5·18 행방불명자의 DNA가 검출됐다”며 “그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사격이나 암매장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던 신군부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차 보상금 지급 조사 당시 가족이 행방불명됐다고 접수해 온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단체 차원에서 이들 비인정자에 대해 추가 접수를 받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단체는 “올해까지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아울러 추가 발견된 행방불명자들이 5·18 참여 유공자로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8차 5·18 배상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28일부터 행방불명 비인정자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접수시 개인정보 동의와 채혈동의서를 받으며 명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1980년 5월 18일 상무대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행방불명된 고물장수 최영찬(당시 50세)씨의 아들 최승철씨도 참석했다. 최씨는 “나이 60이 되도록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한 많은 삶을 살았다”며 “열경선씨 일을 계기로 우리 아버지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재 대피 이렇게 하세요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태봉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입과 코를 막은 채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북구청은 이날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구청 압수수색...구 금고 선정 연루 장학회 수사

검찰이 광주시 광산구 금고 선정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산구 장학회 관계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와 광주시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8시께 광산구청 6층에 있는 장학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광산구 금고 선정 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장학회 관계자 A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시 심의 위원 명단 유출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광산구 1금고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다.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은행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산구 공무원들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브로커 문흥식씨 징역 4년 6개월 선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구속 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4000만원을 받아 7억원은 혼자 챙기고 나머지는 공병 이모(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한술 기업(일남건축물 철거)·다윈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 받은 혐의

는 유죄로 봤다.

문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씨가 전·현직 조합장과 친분이 있고 철거업체에 오래 몸담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증인들의 진술, “돈을 빌려주면 지역 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수하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정상, 급매 합니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

투자, 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